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 통일 주변환경 조성 중심

2010. 9

통일정세분석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 통일 주변환경 조성 중심
2010. 9

황병덕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1
I.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개관	3
1.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등장 이전 아데나워 정책	3
2.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추진환경	5
3.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기본구상과 귀결	10
II. 분야별 통합현황 및 평가	18
1. 정치통합	18
2. 경제통합	18
3. 사회통합: 통독 후 동서독 지역 간 이질성 문제	22
III.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24
1. 대북포용정책의 신동방정책 수용에서의 오류	24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27

표 목 차

<표 I -1> 접근을 통한 변화	17
<표 II-1> 구동독지역 통합과정의 지표	19
<표 II-2> 1991-2003년간 통일비용 부문별 사용내역	20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한반도 분단과 더불어 형성된 분단국가 독일은 2010년 10월 3일에 통일 20주년을 맞이하는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 분단 상황이 고착되고, 최근 천안함 사태로 남북대치 상황이 고조되는 등 매우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
- 특히 독일의 경우 양독 분단선을 유럽 분단선으로 인식하고 신동방정책 추진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유럽 분단 구조의 약화를 통해 양독관계 정상화를 모색
 - 이러한 토대 위에서 양독 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하여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을 서독지향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동독주민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 소련의 몰락으로 평화통일 이룩
- 그러나 신동방정책을 모방한 햇볕정책 추진자들은 남북 간 휴전선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분단선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상의 오류를 범하여 북한 개혁개방 유도, 「사실상의 통일」 달성 등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문제가 기본적으로는 민족문제이지만 상위 틀로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문제라는 점을 환기
 - 이러한 측면에서 서방·동방 간의 갈등해소 목적으로 추진된 신동방정책으로 독일통일이 완수되었다는 점은 한반도통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

- 따라서 본 보고서는 독일통일 20년 성과와 함께 독일통일을 일구어 냈던 신동방정책을 조망해보고, 신동방정책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I.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개관

- 1990년 독일통일은 통일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상호결합하여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형태로 이루어졌음.
 - 동독에 대한 서독의 정치·경제·사회체제상의 절대적 우위가 독일통일의 내재적 요인인 반면,
 -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구조가 와해되어 서독에 유리하게 조성된 주변환경은 독일통일의 외재적 요인임.
- 서독은 1960년대 후반이래로 이러한 체제우위를 토대로 공산독재 체제는 외부압력에 의해 극복될 수 없고, 접근을 통한 체제내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신동방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함으로써, 민족자결권에 입각하여 통일의 외적 요인인 대외정세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독일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임.

1. 신동방정책¹⁾ · 독일정책²⁾의 등장 이전 아데나워 정책

- 1955년 재무장 및 나토 가입을 계기로 아데나워는 1963년 퇴임시까지 서유럽통합정책을 추구하는 동시에, 서방정책을 기반으로 이

1) 동방정책이란 중부유럽에 위치한 서독이 분단 후 대소련정책, 대동유럽정책, 대동독정책(Deutschlandpolitik)을 포괄하는 총체적 전략을 의미하며, 아데나워류의 동방정책과 구분하여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신동방정책이라고 부름.

2) 일반적인 의미에서 독일정책은 19세기 비스마르크의 독일통일 이후 유럽강자로 등장한 독일에 대한 정책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과 통일로 집약되는 ‘독일문제(die deutsche Frage)’에 대한 전승국들의 외교정책과 분단 당사국인 동서독의 정책을 의미함.

전 보다 공세적인 독일정책을 추진하였음.

- 아데나워는 “자유민주체제에 의해 자유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신념으로 서독 외교정책의 최고목표를 독일통일에 두었으며, 동독은 국제법적 의미의 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동독이 서독에 병합되는 합병통일 추구
 - 아데나워는 「힘의 우위정책(Machtpolitik)」에 입각하여 통일정책을 추진, 서방측의 단합으로 소련과 동구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경제력 및 국방력을 강화시켜 강력한 서독의 힘을 바탕으로 동독의 국가존재를 부인하고 서독정부의 유일 합법성을 강조하는 「단독대표권」과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치 않는다는 「할쉬타인 독트린」을 추진
 - 특히 아데나워는 독일의 영토를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영토로 규정, 전후 동독이 수용한 오테르·나이세강을 경계로 한 영토 축소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소련 및 폴란드, 체코 등으로부터 실지회복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았음.
- 그러나 아데나워의 독일정책은 1950년대 말부터 태동된 국제정치상의 긴장완화 분위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미국과 불협화음을 보여주었으며, 독일문제 관련 대소 외교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음.
- 특히 소련이 1958년 서베를린을 서독으로부터 분리하여 중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교통망을 동독이 통제하여 야기된 베를린 위기는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독일분단 구조를 고착화 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아데나워의 독일정책이 독일분단의 벽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독일국민들에게 인식

- 이미 1950년대 말에 미·소간에 긴장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데나워는 독일의 현상유지를 담보로 하는 긴장완화에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미국의 대소정책의 변화는 아데나워의 정책노선을 결정적으로 와해시켰음.
 - 케네디는 과거의 대량보복전략 대신 평화전략을 추진하였는 바, 이러한 독일의 현상유지를 인정하는 평화전략은 아데나워의 동독 불인정정책 및 실지회복정책과 정면 배치

2.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추진환경

가. 국제적 여건

- 서방연합국들은 동독 불인정, 과거 국경선 고수 등의 서독의 독일정책을 비판하고 정책노선 수정을 요구하였는 바,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공산주의자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회주의권과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평화전략을 1963년 공표
 - 케네디의 암살로 미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 행정부는 동구권국가들에게 화해를 시도하는 가운데 독일통일이 동·서 긴장완화를 하기 위한 전제가 아니라 긴장완화의 결과로서 가능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아데나워의 독일정책 노선을 무시
- 이와 유사하게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우수리 강을 둘러싸고 소련과 중국 사이에 국경분쟁이 발발하자, 중국 국경지대에 군사력 증강을 위해 유럽에서의 안보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였고, 1960년대 후반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제침체를 서방의 자

본, 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안보·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음.

나. 국내적 여건

■ 집권당 사민당·자민당

- 이러한 환경변화에 때맞춰 1969년 브란트를 총리로 하는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동서 긴장완화에 서독의 적극 참여,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의 인정, 통일 유보 및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는 등 범유럽적 차원의 평화질서 확립을 표방하는 사민당의 신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
- 1950년대 사민당은 야당으로서 독일정책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냉전적 여건과 기민당의 서방정책에 의해 좌초되었음.
 - 브란트는 1957년이래 서베를린 시장으로서 베를린 위기, 베를린 장벽 구축 등을 목격하고 동독의 전체주의 체제와도 협상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
- 이와 유사하게 브란트 보좌관으로서 신동방정책의 창안자 에곤 바는 독일 사민당의 신동방정책의 강령적 출생신고서인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핵심명제를 1963년 발표하였음.
 - 에곤 바의 신동방정책은 독일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소련에 달렸으며, 긴장완화·평화정책의 일환으로 소련과 협상을 통하여 통일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 에곤 바는 서구민주주의 모델의 장점을 긴장완화 및 교류협력을

통해 동독주민들에게 부각될 수 있다고 이해

- 독일통일은 일시적으로 급진적 방식에 의해 달성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 만일 독일통일 과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면 소련의 개입으로 실패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기적만 바라는 과거의 통일정책은 어떠한 정책도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

○ 사민당의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은 동독정권의 붕괴나 국제법적 단독대표권 주장을 고집하는 과거의 정책과는 질적인 차별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우선 먼저 독일민족의 일체성 유지가 최우선적인 관심사였음.

○ 신동방정책의 핵심사항은 유럽평화의 유지·발전 차원에서 동독 불인정정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정책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브란트정부는 동독을 국제법적인 주권국가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로서만 인정, 독일통일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경우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한 독일통일을 추진

○ 신동방정책의 단기목표는 국제질서에서 서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분단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이었으나, 장기목표는 동구권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유럽 분단구조를 약화시키는 한편, 양독 간의 긴장완화 및 무력포기를 통하여 유럽평화를 형성·유지하면서 민족일체성을 확대하여 독일통일을 달성하는 것이었음.

- 신동방정책의 제1단계는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수립 및 불가침협정체결을 통하여 동서 긴장완화 달성을 목

- 적으로 하였고 (동서 긴장완화를 통한 유럽분단 구조 완화),
 - 제2단계는 동독을 국제법적인 주권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되, 「사실상의 국가」로서 인정하여 동서냉전의 최전선이었던 독일문제를 유럽 평화질서 구축 차원에서 접근 (양독관계 정상화 및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독일분단 구조 완화)
 - 제3단계는 신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은 동서독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동서 긴장완화 추구를 통하여 유럽분단을 완화시키는 가운데 민족 자결권 행사를 통하여 동서독 분단을 종식시키려는 정책 (민족자결권 행사를 통한 통일)
-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신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은 일시에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극대주의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수많은 협상을 통해 작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점진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

■ 야당의 입장

- 사민당·자민당 연정의 신동방정책은 그 당시 야당이었던 기민당·기사당의 동방정책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으며, 전체주의 독재정권과 접근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음. 따라서 기민당·기사당은 「힘의 우위정책」에 입각, 여당의 신동방정책에 극렬하게 반대
- 기민당·기사당의 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은 동독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선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입장 아래, 1871년 수립된 독일통일국가의 재건을 목표로 1937년 국경선 유지 입장 견지

- 기민당·기사당은 1969년도 정권교체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정책노선을 고수했음. 신동방정책이 핵심쟁점이었던 1972년 총선에서 기민당·기사당이 패배한 후 자신의 정책노선을 여당의 신동방정책노선으로 전환하였고, 1982년 정권 승계후 사민당의 신동방정책 노선을 계승하였음.

다. 신동방정책·독일정책에 대한 동독의 입장

- 1950년대 중반 이후 체제경쟁에서 불리함을 감지한 동독은 서독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동독 주민들을 통합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 구축을 단행하는 등 대서독 「분리차단정책」을 대서독정책의 근간으로 추진하였음.
- 더욱이 동독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독 체제는 항상 정당성 위기에 노정되었는 바, 따라서 동독지도부는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해주는 신동방정책을 동독체제의 결함을 제거해주는 최소한의 기회로 활용하였음.
- 동독은 1960년대 초 이후 동독주민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증진시키지 않고서는 주민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동방정책을 계기로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자본 조달, 기술 이전, 교역 증대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음.
- 서독의 신동방정책에 따른 동독체제의 국내정치적 정당성 확보는 동독사회주의 체제의 이념적 목표가 갈등에 빠지면서, 동독지도부는 서독체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리차단」 정책을 강력 추진 - 브란트의 「의식민족」 또는 「문화민족」 개념에 대응하여 동독은

1976년 제9차 전당대회에서는 당 강령중 통독조항을 삭제하면서 「사회주의적 독일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서독민족을 「자본주의적 민족」으로 차별화함으로써 2민족 2국가체제 선언

3. 신동방정책 · 독일정책의 기본구상과 귀결

가. 기본구상

■ 브란트정부

- 브란트는 신동방정책을 통하여 과거 정책에 내재되어 있던 3가지 갈등요인을 극복해야 했음.
 - 서방국가들은 서독의 아데나워식 동방정책이 유럽평화 정착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 소련은 서독에게 무력포기, 동독 인정, 현 국경선 인정 등을 요구하였으며,
 - 동독은 서독에게 끊임없이 국제법적인 주권국가로서 인정해줄 것을 요구

- 이러한 서독과 서방세계, 소련 · 동구권국가 및 동독간의 갈등요인은 기본적으로 과거 동방 · 독일정책이 독일의 현상유지 타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들이었는 바, 따라서 신동방정책의 핵심명제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현상유지에 있었음.

- 그러나 신동방정책은 지속적인 독일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장기목표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브란트 보좌관이었

던 에곤 바는 독일의 현상유지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현상유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접근을 통한 변화」 명제에서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음.³⁾

- 더욱이 독일문제의 해결은 소련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국가들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받지 않을 경우 문호를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영토를 존중하고 국내정치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유럽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인식

○ 따라서 독일의 현상유지정책으로서 신동방정책은 양대진영의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에서 긴장완화정책 및 평화정책으로 파악되며, 신동방정책은 WTO(바르샤바조약군)를 해체하거나 일당독재체제를 제거하고자 하기보다는 현상유지를 통하여 경제력, 문화 등 서구체제의 영향력을 동구권사회에 행사하여 동구권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본철학을 지니고 있었음.

- 사민당·자민당 소연정 정부는 기본적으로 독일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할 전망이 없다는 판단과 더불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삼가야 한다고 주장

3) 에곤 바의 「접근을 통한 변화」 명제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케네디 평화전략 개념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이 명제는 추후 신동방정책의 핵심명제가 되었으나, 발표 당시 동독측은 이러한 입장을 동독에 대한 공격으로 비판하였고, 보수진영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화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음. 원래 원고에서 에곤 바는 “동독이 변화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은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동독의 반발로 “국가관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국가들은 접근해야 한다”고 자신의 말을 수정하였음.

- 독일문제를 독일위주로만 생각하던 사고방식은 유럽평화가 지속되는 차원에서 독일분단을 인식해야 한다는 차원의 사고로 전환
 - 독일의 분단은 동시에 양진영 간의 유럽 분단을 의미하므로 통일로의 접근은 유럽에서의 평화유지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시각에 입각, 서독의 독일정책은 유럽의 긴장완화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은 선평화·후통일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독일통일은 일시적인 역사적 행위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인 긴장완화, 사회·경제·문화적인 교류협력 등의 접근을 통한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됨.
 - 브란트의 선평화·후통일 정책은 「선민족통일·후국가통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차원적 통일정책으로서, 동·서독의 관계개선으로 인해 동·서독 주민들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전 독일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단계가 간접적인 민족통일단계로 보았음.
 - 유럽의 평화·안보질서가 확립되고 동·서독의 재통합이 인근 국가들로부터 질시받지 않을 때 유럽국가들이 용인하는 통일국가를 이룩하겠다는 것이 독일의 「국가통일단계」로 인식

- 통일이라는 거대한 구호 보다는 “작은 걸음마 정치”를 구사하여 동방정책을 실질적으로 구상했던 에곤 바가 시사한 것처럼, “접근을 통한 변화”를 꾀하여 “공산주의는 극복되어지지 않고 다만 변화되어진다”는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아주 실제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음.

나. 슈미트/콜정부

- 1974년 브란트 보좌관이 동독간첩으로 드러난 기욤간첩사건을 계기로 슈미트가 새로운 총리로 등장하게 되면서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음.
 - 1970년 중반 서독은 1975년 헬싱키 선언으로 동·서 평화공존이 정착되면서 서독의 대서방동맹 의존성이 이전보다 경감되었으며,
 - 경제공동체 및 유럽정치통합 가능성 제고 등 서유럽 통합의 발전으로 인해 유럽통합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안보문제와 동방 정책에 있어서 브란트에 비하여 보다 냉철하고 실용적인 접근 태도를 보였음.

- 슈미트는 독일통일 여건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기기만적인 통일논리를 멀리하고, 통일여건의 조성 차원에서 내독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등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노력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슈미트는 신냉전의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호네커와 정상회담을 가짐.

- 그러나 1980년대 서독은 1970년대 말부터 조성된 신냉전 기류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역량 증대를 기반으로 신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동·서 양대진영은 서독의 이러한 시도를 독일의 현상유지를 변경하려는 의도로 해석
 - 슈미트는 경제력을 통한 외교적 자율성의 확보를 추구하고자 했으나, 슈미트의 외교정책은 1970년대 말 유럽지역에서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둘러싼 미·소간의 갈등과 1979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기가 도래하면서 중대한 도전에 직면

- 1982년 사민당·자민당 연정이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정으로 바뀌게 되면서 수립된 콜정부는 확고한 서방통합정책의 기반 위에서 동방정책의 자율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략방어계획(SDI)에 동참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과거 브란트 이래 추진해왔던 신동방정책의 기초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서방통합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음.
 - 과거 기사당은 야당 시절 신동방정책과 동서독간 기본조약 무효를 외치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하였으나, 1982년 집권당이 된 후 유럽분단 극복을 통한 통일환경 조성이라는 사민당정부의 기본정책노선을 계승하여, 콜정부는 신냉전하에서도 동서독관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
 -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서 1983·1984년 양년에 걸쳐 서독은 동독에게 약 7억 마르크 차관을 공여
- 서독 콜정부의 서방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소련은 동서독관계의 발전에 제동을 걸었으며, 이에 따라 호네커의 서독방문도 소련의 압력으로 실현될 수 없었음.
-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불편한 독·소관계는 소련이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지원을 절실하게 체감한 1980년대 중반부터 변화하게 되면서, 콜 정부는 이러한 소련의 대외정책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유럽안보협력회의 틀 속에서 개최된 빈 군축회담에 적극 동참하고, 대소 경제원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1988·1989년 콜의 모스크바 방문, 고르바초프의 본 방문이 성사

- 더욱이 서독 콜정부는 대소 경제지원에 대한 대가로 독일문제 해결을 위한 소련의 도움을 촉구함으로써 통일 환경조성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고르바초프는 1989년 본 방문시 민족자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동독에서 민주화혁명이 발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음.

다.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귀결: 독일 평화통일

-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우선 일차적으로 유럽의 적극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 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1975년 헬싱키에서 유럽 및 북·미국가 정상들이 유럽안보협력회의를 결성하였음.
- 서독의 신동방정책은 아주 실제적이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는 바,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 후 양독은 1973년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양독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동질성 유지 및 회복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해 왔음.
 - 내독교역은 냉전의 도구가 아니라 양독간의 긴장과 대립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 이에 따라 내독교역은 양독간의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각종 정책적 배려에 의해 1970년대부터 1985년까지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냈고, 그 규모도 동기간 동안 3.5배나 증가
 - 1987년도의 경우 서독인의 동독방문은 5백50만명(관광인원, 친척방문 등), 동독인의 서독방문인원은 340만명(연금수혜자 220만명, 긴급가사사유자 120만명)

- 서독정부의 신동방정책으로 말미암아 동독은 대외정책적 측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갖게 되었지만, 국내정치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위협성을 안고 있게 되었음.
 - 동독은 교류협력의 심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서 냉전체제하의 「유럽의 분단」이 지속되는 한 소련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동독체제가 서독으로 흡수 병합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간주

- 양독간 인적·물적 교류는 서독의 우월한 물질문명을 동독사회로 전파, 직접적으로 독일통일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음.
 - 동서독간 교류협력은 독일민족의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함께 동독주민들의 정체성(Identität) 형성을 서독사회 지향적으로 만듦으로써 흡수통일이라는 독일통일의 촉매제 역할 수행

-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으로 동구권 위성국가들의 소요사태에 소련군이 개입하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폐기되면서 동독주민들이 공산주의 동독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일통일을 완성
 - 서독정부는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독일이 유럽 지붕 아래의 독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킴으로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

<표 I-1> 접근을 통한 변화

신동방정책·독일정책(현상유지를 통한 점진적 현상 변화)

- (主) 유럽 평화안보정책 --->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 서방정책 - NATO 편입 및 서방통합정책
 - 동방정책 - 구동방정책 폐기(과거국경선 인정, 동독 인정 등)
 - 동방조약정책(독·소 불가침협정, 독·폴 불가침협정 등)
 -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 형성
 - (從) 화해협력정책 ---> 분단고통 감소 및 민족동질성 증가
 -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 ---> 관계 정상화
 - 교류협력 증대 <---> 동독의 분리차단정책



- 체제우위 입증에 의한 점진적 현상타파
- 체제접근을 통한 소련 사회주의 변화
 - 동독주민 정체성 서독지향성 증대



- 독일의 평화 통일
- 고르바초프 사회주의 개혁 도래
 - 동독 민주화혁명
 - 유럽 평화질서 유지 아래에서 민족자결권 행사

II. 분야별 통합현황 및 평가

1. 정치통합

- 동서독체제 간 발전정도나 이질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독일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문제없이 정치통합을 달성하였음.
 - 정치적으로 동독지역에서는 서독 정당이 동독지역에 진출하여 정당간 통합을 완료하는 등 서독의 민주적 정치체제가 자리잡았음.
 - 물론 급격한 흡수통일의 여파로 동독지역에 좌파정당이 동독지역의 지역당으로 고착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으나, 독일통일의 경우 정치적 문제점은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비교해 볼 때 거의 문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2. 경제통합

- 2007년도 구 동독지역의 서독지역 대비 생산성은 77%, 임금은 77.5% 기록 중
 - 여전히 동독지역 GDP의 30%가 서독지역에서 오는 통일지원금이 있고 여전히 15% 전후의 두자리 수 실업률 존재
 - 2007년 독일 1인당 GDP는 60,996유로, 구서독 63,076유로, 구동독 48,640유로

<표 II-1> 구동독지역 통합과정의 지표

지표	1995	2007
1인당 국민총생산	60.6	67.9
1인당 장비 및 시설투자	105.0	64.8(2004년 기준)
평균임금	74.8	77.5
노동생산성(노동자별 총생산)	66.4	77.1
노동생산성(노동시간별 총생산)	64.3(1998년기준)	73.1
시간당 생산가	112.7	100.3

가. 사유화정책

- 독일통일 후 신탁청이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관리와 사유화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독일 신탁청은 시장경제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충분하지 못한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방법보다는 국영기업을 신속하게 민영화시키거나 폐업시키는 방법을 선호하였음.
- 근로자에게 우대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국민에게 민영화 증서를 무료로 배분하는 방법, 토지 및 주택의 기존 사용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유상으로 분배하는 방식 등 대중적 사유화방식은 구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방안으로 채택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는 직접매각방식만이 구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방식으로 채택되었음.
 - 이는 동서독 주민간의 형평성 문제, 집권당의 보수성, 장기간의 시행기간, 일정 과도기 동안의 이중적 재산권 구조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구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조치 가운데 미해결 재산권문제는 구서독 기본법 사유재산권 보장 조항의 준수와 더불어 구동독의 기존 재산권구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원소유주로의 반환으로 결정되었음.
- 신탁청의 사유화 우선원칙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정상화정책은 도외시되었기 때문에, 신탁청 산하기업의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해 휴·폐업 업체가 증가되어, 이것이 실업률 증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나. 통일비용

- 통일 후 1990년부터 2009년까지 통일비용으로 약 1조 7천억 유로가 사용되었으며, 전체 통일비용 지출 중 사회복지 부분 등 소비성 지출이 약 50%를 차지하였음.
 - 통일비용 재원 가운데 세금인상은 연대추가징수금(Solidaritaetszuschlag) 7.5%를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에 부가하였음.
 - 국가채무 증대, 세금 인상 등의 부정적 요인을 가져왔음.

<표 II-2> 1991-2003년간 통일비용 부문별 사용내역

사용내역	비율(%)
기업경제 원조비용	7
산업시설 건설비용	12
사회복지부문 비용(연금, 노동시장, 의료보험 등)	50
주정부 재정 지원비용	23
기타	8

- 동독지역 재건은 다방면의 보조를 통한 개인 투자활동과 기업설립 촉진, 사회간접자본 건설, 동독기업들의 활동조건 개선, 신탁청을 통한 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 등임.

다. 통화단일화

- 경제·통화·사회통합협약으로 전체 독일에 대한 단일 경제단위의 원칙이 적용되었는 바, 1,980억 동독마르크가 1,200억 서독마르크로 전환되었음.
 - 분단 기간 동안 서독마르크 대 동독마르크의 환율은 은행에서는 1:4-1:8, 암시장에서는 1:30의 환율로까지 교환되었음.
 - 통일 후 1:1, 1:2의 환율로 교환되었음.
 - 나이에 따라 1:1 교환비율은 제한되었으며, 임금, 연금, 임대료 등도 같은 환율을 적용하였음.
 - 그 이상의 추가액은 1:2의 환율이 적용
 - 이러한 환율정책으로 동독지역 생산비 상승 유발효과가 발생, 생산성이 낮은 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을 야기
- 통일 후 초기 동독지역 경제의 급속한 붕괴의 근본적 원인은 계획경제 속에서 움직이던 구 동독시장을 과도기적 보호조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시장경제로 유도하지 않았던 경제정책에서 찾아야 함.
 - 단시일 내 이루어진 통화 단일화, 부적절한 환율 채택 등으로 동독지역 기업들의 몰락
 - 예산 집행상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 미비

3. 사회통합: 통독 후 동서독 지역 간 이질성 문제

- 독일의 정치적, 제도적 통일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동·서독지역 주민 간에는 상당한 정신적·문화적 이질성이 상존하고 있는 바, 이는 대다수 동독지역 주민들이 과거의식과 생활양식에 젖어 아직 통일 독일의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문화제도 및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구서독인에게 심리적인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이밖에도 서독인들은 통일세 명목으로 세금부담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지역 이주민으로 인한 주택문제, 범죄문제 등으로 사회안정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 동독인들은 통일을 통해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희망이 실제 통합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미흡함에 대한 실망으로 전환되어 2009년 9월 27일 총선 결과에서 구동독지역에 뿌리를 둔 좌파 정당들이 구동독지역 유권자의 2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음.
 - 실업문제, 물가등귀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동서독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사회심리적 갈등구조가 자리를 잡고 있음.
- 이러한 사회심리적 이질화현상은 동독지역에서 사회범죄의 급증, 네오나치즘의 등장과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 및 공격행위 등으로 표출되었음.
 - 동독지역의 후생복지수준의 낙후는 청소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켜 이들을 극우지향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전면적 해체 이후 동독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이념체계의 구심점으로 등장한 범게르만 민족주의는 극

- 우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배양하는 온상이 되고 있음.
- 이외에도 동독지역에서의 극우세력 대두는 비민주적 정치문화, 다른문화 및 생활양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폐쇄적 과거 동독체제의 내적 구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음.

Ⅲ.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1. 대북포용정책의 신동방정책 수용에서의 오류

- 한반도에서 평화·화해·협력·변화를 목적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을 지향하였던 과거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정치·군사적 체제안보를 보장하면서(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남북한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사실상의 통일 추구)으로 추진되었는 바, 이러한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독의 신동방정책·독일정책에서 기본발상을 가져온 것임.
 -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이란 우선 동·서 양진영의 긴장완화를 통한 유럽 평화정착, 동독의 실제 인정 등의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되(접근),
 - 중장기적으로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하여 현상유지를 타파하고 동독의 변화를 견인한다는(체제 변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서독 사민당정부는 소련 및 폴란드와의 불가침협정 체결,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등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신동방정책을 실시
 -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의 결과물로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분단고통 감소를 위해 동·서독 간 교류협력도 적극 추진
-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서독의 신동방정책을 모방하였으나,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rung)」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음.
 - 서독은 유럽의 현상 유지, 상호 불가침, 오데르·나이제강 국경선

- 유지, 동독 현상유지 등의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고 동독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먼저 유럽의 분단의 벽을 낮추고, 그 다음 동독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접근을 통한 변화」 전략 구사
- 에곤 바(Egon Bahr)의 동서 양대 진영의 긴장완화정책인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aerung)」 전략을 교류협력 정책을 의미하는 「접촉을 통한 변화⁴⁾」로 오인
- 과거 한국정부들은 동서 양진영의 유럽분단의 벽을 낮추려는 신동방정책의 우선순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신동방정책의 결과물인 동서독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지적 미숙을 드러냈음.

- 특히 과거정부는 남북한 휴전선을 단순히 남북한 간의 대결 경계선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노출하였음.
 - 최근 천안함 사태가 보여주듯이 휴전선은 아직도 여전히 대륙세력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해양세력, 미국, 한국, 일본 등 사이의 대치선으로 작동
 -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양대 세력의 긴장완화와 양대 세력의 안보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활성화되기 어렵고,
 - 설사 활성화되었을지라도 최근의 미·중 갈등이 보여주듯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대결이 심화될 경우 그 동안 어렵게 이룩해 놓았던 남북 교류협력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음.
- 이처럼 신동방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인식상의 오류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양대 세력의 분단·대

4)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문건에서 사용된 용어

립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정책적 초점을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에 놓는 전략적 오류를 내포하였음.

-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주어진 여건 및 시대사적 배경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본발상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동방정책은 유럽 양대 진영의 긴장완화 및 평화 유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동서독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이루었음.
 - “남북이 서로 오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황” 달성을 목적으로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 등 접촉면의 확대를 추진하는 대북포용정책은 동서독 간 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분단고통의 감소와 더불어 체제우위 입증을 목적으로 하였던 서독의 독일정책과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지만,
 -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인 「사실상의 통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한반도 안보위기가 발생하면 남북교류협력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

-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목표로 하였으나, 안보적 측면에서의 미·중 관계와 남북관계 개선을 도외시한 채, 북·미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상 오류로 인하여 대북포용정책이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협력도 분명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음.
 - 금강산 관광 등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추구되었던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을 경우 항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내포

- 서독의 신동방정책 및 독일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독이 화해·협력에 의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임.
 - 국제정치적으로는 동·서독이 동서 양대 진영으로 나누어진 NATO와 WTO(바르샤바 조약군)에 각각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WTO(바르샤바 조약군)가 붕괴하지 않는 한 민주화혁명을 통한 동독 붕괴는 불가능
 - 동독의 안보는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WTO(바르샤바 조약군)가 보장하고 있고, NATO와 WTO(바르샤바 조약군)의 전략적 대립은 동서 데탕트, 서독과 소련의 불가침협정 체결, CSCE 가동 등으로 약화됨으로써 유럽과 독일의 분단의 벽이 낮아지고 양독 간 화해협력의 제도화 기틀 마련

2.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갈등 극복과제

- 대북포용정책은 기본발상이 신동방정책과 유사하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주변 국제적 여건들은 신동방정책 추진여건과는 상당 부분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 독일의 경우 동서 양진영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중부유럽에 위치하여 양대 진영의 갈등구조가 독일문제를 둘러싸고 전개
 - 냉전시절 이미 양진영은 군비경쟁을 통하여 전략적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평화공존이 안보적 대안으로 부상
 - 과거 국경선 고수, 동독 불인정 등 아테나위식 동방정책·독일정책이 유럽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
 - 따라서 브란트는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신동방정책을 전향적으로

로 추진하여 소련의 안보적 이익을 수용하는 불가침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의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소련의 동의 아래 동서독 간 관계를 정상화시켰음.

- 신동방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 양진영이 집단방위체제로서의 NATO와 WTO의 현상유지적 세력균형 정책 이외에도 양진영 간의 안보질서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했던 지역 다자안보협의체로서 CSCE를 형성, 유럽의 안보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관리하였기 때문임.
 - 공동안보를 기본으로 하는 다자안보협의체로서 CSCE는 동·서 양대 진영이 군비확장 등의 절대안보 추구를 통한 세력균형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군비확장을 자제하고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을 추구하려는 미·소 양대 진영의 대외정책 변화에 기본 동인
 -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CSCE의 인권조항과 인도주의 및 기타 분야 협력을 관철시킨 것은 과거 상호불신에 입각한 경성권력(hard power)을 행사함으로써 소련 사회주의를 붕괴시키는 안보전략 대신, 적정 수준에서 전략적 균형을 이룬 다음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과 같은 연성권력(soft power) 행사를 통해 사회주의체제의 내부붕괴를 유도하겠다는 전략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안보환경은 단순한 진영논리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이념적인 대결구도, 국익을 우선시하는 국민 국가적 갈등 구조, 중국의 부상, 북한문제, 향후 세계 주도권 쟁탈 목적의 미·중간 헤게모니 쟁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서로 얽혀져 있음.
 - 한국, 미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국가발전모델의 차이

로 인한 갈등을 내포

- 중국, 러시아 등은 스탈린주의로부터 탈바꿈하여 세계시장 지향적 발전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부분적으로 사회주의 동맹관계를 존속시키고 있으며,
- 중국과 미국은 향후 세계질서 주도권 쟁탈로 인해 서로 견제
- 한국과 일본 역시 중국과 체제모형 및 이념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구조를 안고 있는 동시에,
- 한국과 중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문제로 인해 일본에 대한 민족 국가적 갈등문제를 지니고 있음.

○ 현재 동아시아 안보환경은 군비경쟁이 확대일로에 있는 등 현상유지적 세력균형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안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여전히 절대 안보를 추구하고 있음.

- 동아시아는 일초다극체제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불균형적 양극체제로 변모해가는 역학구도 아래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의 첨단화와 군비증강 추세, 유동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면서 협력과 갈등, 공조와 대립의 이중성을 내포

○ 미국의 패권유지 세계전략과 미·중 패권갈등,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공존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가능성, 일본과 중국의 역내 주도권 경쟁, 중국·대만 간의 갈등, 역내 도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 등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현상타파 내지 현상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주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음.

- 동아시아에는 높은 성장 잠재력과 상호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중상주의적 관성에 의해 경제통합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존재

- 이러한 요소는 19세기 말 국가주권을 회복한 동아시아 제국에 국가주권 이양에 대한 거부감 및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해 경제 공동체 형성은 물론, 안보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
- 향후 형성될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바, 최근 천안함사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이 보여주듯이 미·중 관계는 한반도 및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최대 안보문제로 부상하였음.
- 북한 핵문제, 한반도 분단과 통일로 요약되는 한반도 문제는 민족적 문제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국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제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 특히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사활적 안보이익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중 패권갈등 과정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전략적 이익이 교차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 동아시아 분단의 하부구조로서 한반도 분단구조는 미국, 중국 등의 주변국들의 이해를 조정·수렴하는 전략적 구도가 없다면 해소되기는커녕 미·중 패권갈등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심각한 안보위기 발생 가능성 농후
- 따라서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교훈은 주변강대국들의 이익 조정을 통한 갈등 해소가 최우선적 선결과제이며, 미·중 갈등해소가 한반도통일의 필수조건임

- 한국사회는 한반도 문제의 기본구조를 남북관계, 북·미 관계 등의 일차원적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한계 노출
 - 대륙세력 중국, 러시아와 해양세력 미국, 일본 등의 본질적 전략적 이해가 부딪치면서 한반도 분단, 한국전쟁, 북한 핵문제, 한반도통일 등의 한반도 문제가 동아시아 분단이라는 본질이 발현된 현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함.
- 또한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교훈은 북한의 군사위협 억지에 초점을 맞추어온 한·미동맹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보 유지로 그 책임영역을 확대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될지라도 중국 등 역내 국가들의 이익과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현명한 외교전략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한·미동맹이 미·중갈등 구조에 편입된다면 북한 핵문제, 북한 급변사태 등으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가중될 수 있는 바⁵⁾, 따라서 한·미동맹은 북한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작업은 역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다자간 안보대화 노력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특히 미·중 패권경쟁이 분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한국의 역할 증대방안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만분쟁, 북한문제, 영토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중 패권전쟁과 같은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안보전략도 개발해내야 함.
- 현재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비록 불균형적 양극체제이지만, 미국이 한·미/미·일동맹의 기반 위에서 현상유지적 안보전략을

5) 2010년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중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이면, 최악의 경우 한국의 대중수출에 대한 중국의 제재 추진도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수행하면서도 민주주의, 인권, 복지 등의 연성권력을 행사하도록 유도 필요

- 한국의 동아시아정책은 미국이 중국의 민주화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안보·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정책적 기본목표를 두어야 함.

○ 유럽에서 미·소 양국은 현상타파적 안보전략을 현상유지 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독일분단 구조는 점차 CSCE 등의 구성 및 활동으로 유럽 분단구조가 해체됨. 이에 교류·협력의 증대, 평화통일 등으로 귀착되어 궁극적으로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음.

○ 만일 동아시아도 유럽의 경우와 비슷하게 미국과 중국이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연성권력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면, 불균형적 양극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안보 및 협력안보를 기본으로 하는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가 탄생되고, 이와 병행하여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풀리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인 주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분석됨.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인수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통일에 주는 시사점**
- 통일 주변환경 조성 중심

통일정세분석 2010-05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02-901-2606 팩스 : 02-901-2572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0년 9월
발행일	2010년 9월



서울 강북구 4·19길 275
전화 : 900-4300(代)